

---

#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--

2025. 1. 22.



법 제 처

# 순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.....           | 1  |
| II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      | 2  |
| 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 .....          | 4  |
| 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·지원 ...  | 4  |
| ②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... | 9  |
| ③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.. | 13 |
| 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 ....  | 17 |

# 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

## 1 주요 정책성과

### □ 국정과제 및 민생법안의 입법성과 창출

- (국정과제 입법계획) 국정과제 법률안 총 488건 중 284건 통과(58%)
  - 국정과제 관련 하위법령안 총 290건 중 261건 제·개정 완료(90%)
- (민생토론회 입법계획) 민생토론회 후속 법률안 총 100건 중 33건 통과(33%), 하위법령안 총 68건 중 44건 제·개정 완료(65%)
- ('만 나이'로 법적·사회적 기준 통일) 「행정기본법」에 '만 나이' 원칙을 명문화('22.12.27. 공포)하여 정부 출범 첫 해에 국정과제 조기 이행\* **국정 13-5**
  - \* 발의 9개월만에 국회통과 완료('22.5.17. 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, '22.12.8. 국회 통과)
- (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) 중앙·지방 간 협업을 통해 지방 사무에 대한 조례 위임 확대 등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추진 **국정 111-2**
  - \* ('23년) 82개 법률 국회 제출(29개 국회 통과) 및 65개 대통령령·부령 공포·시행

### □ 소상공인·청년 등을 지원하는 법령정비

- (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)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267개 법령 정비 **국정 1-3**
  - \* 65개 법률 국회 제출(5개 국회 통과) 및 139개 대통령령, 63개 총리령·부령 공포·시행
- (선량한 소상공인 보호)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 시 대응근거, 청소년의 신분증 위·변조에 속아 술·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
  - \* 6개 법률 국회 제출('24.9.26. 5개 국회 통과) 및 2개 대통령령, 4개 부령 공포·시행('24.3월~)
- (청년 경제활동 촉진) 청년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148개 법령 정비 **국정 92-3**
  - \* 16개 법률 국회 제출(9개 국회 통과) 및 74개 대통령령, 58개 총리령·부령 공포·시행

## 2 개선 필요사항

- (국회 법안처리 대책 마련 필요)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였으나, 다수 법안이 국회 계류 중
  -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으로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 수립·추진 필요

## Ⅱ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 추진 여건

- (입법 환경)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·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나, 입법 환경은 불확실
  - 불확실한 정치 · 국회 일정으로 인해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(국정과제 법안 및 민생 법안 등)의 통과 난항 예상
  - 불확실한 입법 환경에도 불구하고, 실질적인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의 One-Voice 대응 및 입법 역량의 결집 필요
- (경제 여건) 고물가 · 고환율 · 경기회복 둔화 등 경제 여건 악화 우려, 미국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
  -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, '25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낮을 전망(한국은행)
  -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성장이 중요하나, 고환율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
  -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(산업연구원), 규제정비 등 적극적 법 · 제도 개선 지속 필요
- (미래 대비) 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입법수요 대응 및 저출생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이 미래 대비에 필수적인 상황
  - 인공지능(AI)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,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조치 수요 증가 전망
  - 저출생 및 양극화 해소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 수요 증가 예상
  - 시각장애인 · 체류외국인 등 법령정보 소외계층의 지원 요구에 대응할 필요

2025년 법제처 업무보고

#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



## 01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·지원

입법 환경에  
대응하는  
적극적 입법 총괄 관리

정부 정책의  
신속한 구현을 위한  
법제지원

지방시대를  
앞당기는  
중앙·지방 협력 강화

## 02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

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 
법령 정비

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 
법제 개선

민생회복과 갈등 해소를  
지원하는  
신속한 법령해석

## 03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

수요자 밀착형  
법령정보서비스 제공

세계와 함께하는  
법제교류 확대

### 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#### 1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·지원

##### 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 입법 총괄 관리

###### □ 주요 입법 완수를 위한 총괄 관리 강화

- (입법계획 이행 완료 지원) 국정과제·민생토론회 입법계획 중 잔여 입법과제의 신속한 입법조치 추진
  - 입법 상황의 철저한 점검·관리를 통해 주요 법안 관련 입법계획의 이행 완료 추진

【 입법계획 추진 현황('24.12.31. 기준) 】

| 구분 | 국정과제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민생토론회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   | 법률   | 국회통과<br>완료 | 하위법령 | 정비<br>완료 | 법률    | 국회통과<br>완료 | 하위법령 | 정비<br>완료 |
| 현황 | 488건 | 284건       | 290건 | 261건     | 100건  | 33건        | 68건  | 44건      |

- (국회 계류 법안 관리 강화)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·관리를 통해 국회통과 지원 및 차질 없는 정책 수행 뒷받침
  - 계류 법안에 대한 부처별 국회통과 노력을 매월 점검·독려
  - 국회통과 필요 우선순위가 높은 정부 추진 법안은 본회의 통과 시까지 입법상황 계속 관리

###### □ 부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의원입법 지원 플랫폼 구축

- (부처 수요를 반영한 법제 지원) 예비검토(의원발의 前) 및 사후검토(의원발의 後)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, 각 부처 수요에 맞는 법제 지원

▶(지원대상) 양극화 해소, 4+1 개혁 관련 법안, 국정과제·민생토론회 후속 법안, 각 부처의 주요정책 법안 등

- 의원입법 사전·사후 지원계획을 수립, 분기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속 검토 법안목록 현행화, 검토 우선순위 선정
- 신속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주요 쟁점에 대해 우선 검토·회신하는 「신속검토 제도」 시범 실시

- (의원입법 원스톱 서비스) 부처에서 원하는 경우 전담법제관을 지정, 예비검토·사후검토 및 이견조정까지 단계별 One-stop 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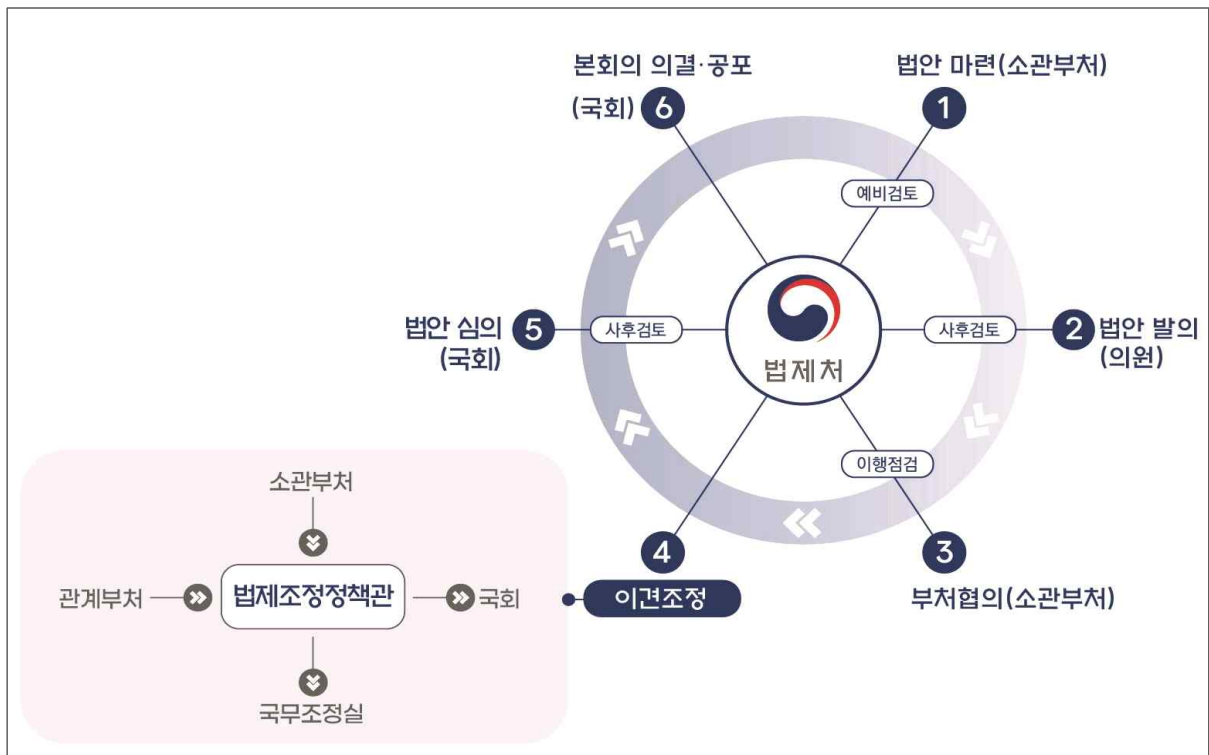
#### 【 의원입법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 】

- ① (1단계: 예비검토) 발의 前 조문화, 법체계 검토 및 대안 제시
- ② (2단계: 사후검토) 법안 발의 後 상임위 심사 前 각 부처에서 국회 심의 대응에 필요한 법리적 쟁점에 대해 사후검토 의견 제시
- ③ (3단계: 이견조정) 법안 발의 後 부처협의 과정에서 이견 발생 시 이견조정

- (선제적 이견조정 활성화) 법제처에 접수된 이견 및 이견조정 수요조사(매월)를 바탕으로 민생 정책 법안 조정 실시, 수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\*

\* 국정과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정(예산 등 명백히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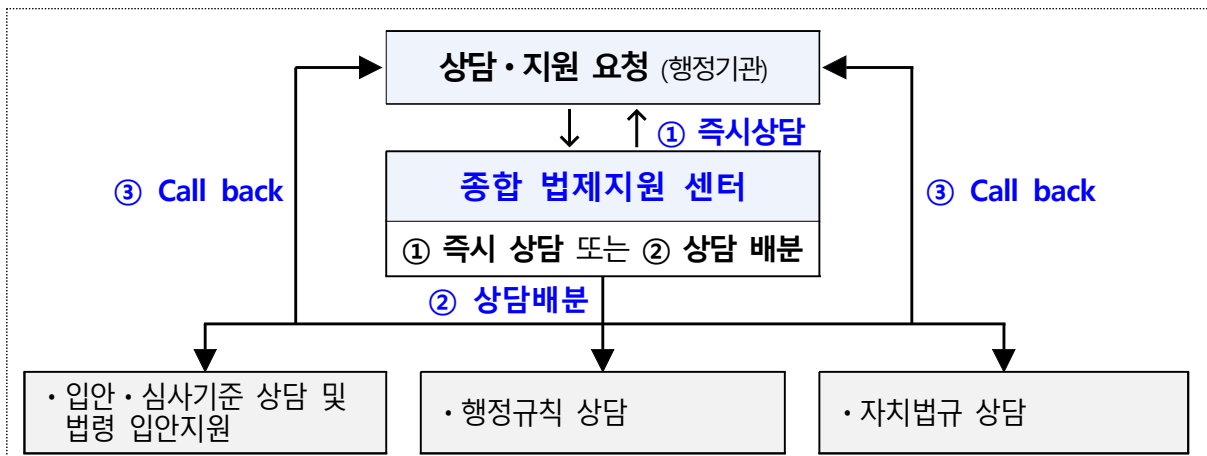
#### 【 의원입법 지원 플랫폼 】



## 2 정부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한 법제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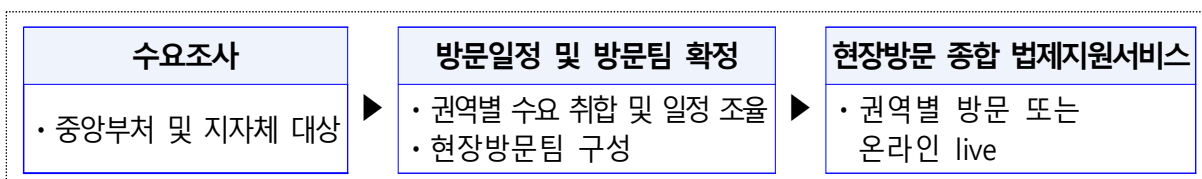
### □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종합 법제지원 센터 운영

- (체계적·효율적 법령 상담·지원 제공) 법령, 행정규칙, 자치법규에 관한 법령 입안지원·상담 업무를 「종합 법제지원 센터」로 일원화하여 통합·운영
  - 전담인력을 배치, 직접 처리(①즉시 상담)하거나 부서 간 협업(②상담 배분 및 ③Call Back 방식)을 통해 입안지원·상담 운영



- (현장형 종합 법제지원) 법령 등을 만들고 집행하는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, 종합 법제지원·상담을 통해 법적쟁점\*을 One-Stop으로 해결

\* ①정책의 조문화 방법 및 입안 절차, ②현행 법령·행정규칙·자치법규와의 충돌 여부, ③예상되는 법리적 쟁점 해소방안 등



### □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을 지원하는 원스톱 법제지원 확대

- (선제적 원스톱 법제지원) 부처의 정책발표 등 신속지원이 필요한 법령안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부처에 선제적으로 원스톱 법제지원 실시
- (원스톱 법제지원 대상 대폭 확대) 신청 대상 법령을 포함하여 연계된 하위법령·행정규칙까지 원스톱 지원 대상에 포함(법안 세트별 지원 실시)
- (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원) 저출생·인공지능·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현안 관련 특정 부처와 상시 협업을 통해 적극적 입안지원 추진

## □ 협업형 법제교육을 통한 국정현안 해결 지원

- (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‘법제 교육’ 강화) 현안 법안·조례의 입안·심사·해석의 이론 및 사례 등 법제 주 과정을 집약한 ‘통합 법제과정’ 운영
  - 현안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‘정책+법제+해석의 고수(高手) 과정’ 특화 운영
- (‘협업형 융복합 법제교육’ 신설) 저출생·AI 등 시급한 국가적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형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
  - 공직자 역량 배양 목적의 법제교육과정을 기재부,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연계 실시

## 3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중앙·지방 협력 강화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입법·정책 참여 지원 강화

- (중앙·지방 간 법제 조정 강화) 중앙·지방 간 법제분야 공식적인 협업 체계\*를 마련하여 국가법령-자치법규 간 전문적인 조정·중재 역할 수행
  - \* “중앙·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”에 지방4대 협의체 등이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 추진
- (국가 정책·입법과정 지방 참여 확대)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3년차 과제로 ‘국가 정책·입법 과정의 지방 참여 확대’를 위한 정비 추진
  -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개선 추진

### 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 】

- 지방자치단체의 조직·인사·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
-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
-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
-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

## □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제 지원 확대

- (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) 지방보조금 사업, 지방자치단체 설치·운영 시설 등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규범 영역 확대 법체계 개선(~'25. 3월)

### 정비 예시

▶ **지역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·운영 기준**(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, 환경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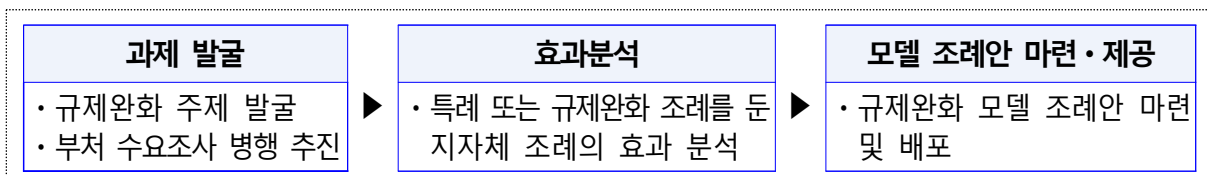
**현행**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·운영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

**개선** 지역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등에 관하여 조례 위임 신설

- (지자체별 특화 법제지원)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사업에 따른 원활한 후속 자치입법 마련·운용을 위한 맞춤형 법제지원\* 실시

\* (중앙부처) 참고 자치법규안 검토 (지자체) 필수위임조례 사전검토·조례안 입법모델 마련 등

- (사전적·적극적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) 규제완화나 주민권익 보호 등 우수 자치법규 발굴·확산을 위한 입법모델 제공 및 자율정비 지원



- (알기 쉬운 조례 정비 확대) 조례 제·개정 과정에서 용어·문장 정비를 병행 추진하는 지자체를 시범정비 협업 기관으로 선정·지원

## □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내실화

- (자치법규 심화·실습 교육 확대) 기존 강의 중심 법제교육에서 자치법규 관련 심화·실습 교육\*으로 확대 개편, 3일 이상 종합 집중 교육과정 운영

\* (예시) 자치법규 입안 원칙 - 조례 재의·재소 사례 - 조례 정비 사례 - 입안 실습·토론

- (지방의회 의원 등 법제연수과정 강화) 법제연수과정을 확대·개편\*, 수요에 따라 지역별·권역별(수도권·충청권·영호남권 등) 실시

\* (지방의회 의원) 연 1회 → 연 3회 / (정책지원관) 연 2회 → 매월

## 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

### □ 소상공인 등 창업·영업부담 완화

- (사업 진입·유지기준 개선) 사업 진입 또는 유지에 규제로 작용하는 영업 공간, 인력·경력 등 보유 요건 개선
  - (영업 공간 기준 유연화) 법령상 영업 공간(사무실·영업소 등) 구비의무 및 면적하한 등을 영업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유연화
  - (인력기준 완화) 인력(명수)·경력(기간) 등 보유 요건은 업종 특성을 고려, 1인·소규모 등 능력 있는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완화

#### 정비 예시

##### ▶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(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산림청)

**현행**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(66㎡ 이상)을 요구하여 사업자 부담

**개선**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수 있도록 유연화

- (분담금 등의 납부 편의 제고)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·부담금·사용료·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에 대한 납부 편의 제고
  -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해 분할납부·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기 등 근거 마련

#### 정비 사례

##### ▶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(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, 환경부)

**종전**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시 분할납부 등 근거 없음

**개선** 중소기업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

### □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

- (의무교육 이수 부담 완화) 청년 등이 군복무 또는 학업 수행 등으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 교육 면제·유예 근거 마련

#### 정비 사례

##### ▶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부담 완화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보건복지부)

**종전**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군복무 등에 대한 근거 없음

**개선**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군복무 등을 추가

- (청각장애인 어학성적 기준 별도 마련)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영어 시험 성적 기준을 청각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# 정비 사례

- ▶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영어시험성적 기준 설정 근거 마련(공무원임용시험령, 인사혁신처)
  - 현행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별도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없음
  - 개선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청각장애인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별도 기준 설정 근거 마련

### □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협업 정비

- (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합리화)<sup>관계부처 협업 추진</sup> 인증 취득·유지에 들어가는 과도한 시간, 비용 및 복잡한 인증 절차 등 인증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시장진입 및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

#### 정비 사례

- ▶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도입(동물보호법 시행규칙, 농림부)
  - 중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, 만료 전 인증갱신을 신청해야 함
  - 개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절차, 신청 기간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사전통지 제도 신설

- (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원)<sup>국조실 협업</sup> 규제샌드박스 제도\*(19. 2. 시행)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효성·안정성이 담보된 신기술 활용 제품·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법제화 지원

\*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, 신기술 시도를 위해 실증특례(시장 테스트 허용), 임시허가(시장 출시 허가) 부여

- (경제형벌 규정 4차 개선)<sup>기재부·법무부 등 협업</sup> 경제형벌 규정이 국민·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4차 개선과제(24. 12. 발표)에 대하여 법제처 주도 일괄정비 추진

#### 정비 예시

- ▶ 품질인증내용과 다르게 전통주 광고 시 형벌 완화(전통주산업법, 농식품부)
  - 현행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를 인증내용과 달리 광고 시, 징역(3년) 또는 벌금(3천만원) 부과
  - 개선 인증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후, 미이행 시 형벌 부과

## 2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법제 개선

### □ 국민 중심의 미래 대비 법제 개선

- (인구소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입법영향분석) 지역활성화와 연계된 폐교 활용방안 등 저출생 시대에 대비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 
\*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등 3개 법률의 연구·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·정비
- (행정 디지털화 촉진 법령정비) **과기부·행안부 등 협업** 전자문서로도 원본의 제출·첨부, 반납·반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령 일괄정비 추진
- (미래 대응 법적 기반 조성) 저출생 등 주요 미래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 연구·분석 및 법제적 지원방안 모색

### □ 따뜻한 동행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

- (권위적 규정 정비) 시대에 맞지 않는 관(官) 중심(국가-국민), 중앙부처 우월적인(중앙-지방) 규정 및 용어 정비 추진
  - 인허가 등 신청 시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취소 후 일정기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등 권위적 절차 정비

#### 정비 예시

##### ▶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규칙 정비

**현행** 법령의 위임이 없이,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

**개선** 해당 규정 삭제 또는 법령상 근거 마련

- (차별적 규정 정비) 나이·성별·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적 규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등 정비

#### 정비 예시

##### ▶ 위원장 직무 대행을 연장자가 수행

**현행**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행자를 지명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대행자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'최고연장자'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

**개선** 법령입안심사기준과 같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정비

##### ▶ 장애인 비하 용어

**현행** 농아자 ➡ **개선**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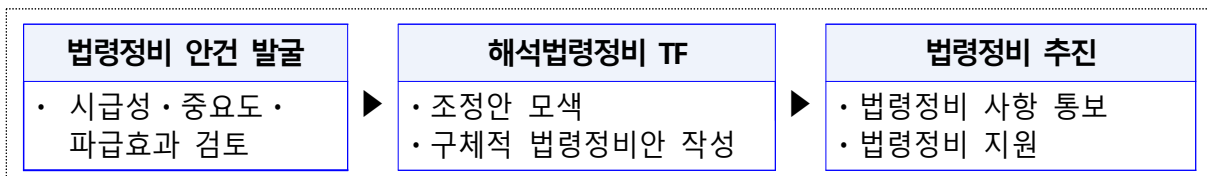
### 3 민생회복과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신속한 법령해석

#### □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

- (민생회복 안전 신속 해석)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①소상공인 ·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 촉진 관련 안전, ②정부 정책의 일관된 집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안전 신속 처리\*

\* 신속처리안전 지정, 전담 TF 구성, 전문위원회 운영 등

- (법령해석과 법령정비 연계 강화) 시급성 · 중요도 · 파급효과가 큰 법령해석 관련 법령정비 사항의 신속한 정비 추진
  - 「해석법령정비 TF」를 통해 법령정비 사항에 대한 법제적 검토 및 대안 모색, 소관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 등 적극적 협의 · 정비



#### □ 법령해석의 협의 · 조정 역할 강화

- (갈등 해소를 위한 법령해석 협의 · 조정 강화) 법령해석 이전에 해결이 가능한 사안의 협의 · 조정 처리를 통해 갈등 요소를 신속히 제거

##### 【 법령해석 협의 · 조정처리 대상 】

- ① 법제처의 검토의견 제시로 의견 대립이 없어진 경우
- ② 법제처 검토 중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변경한 경우
- ③ 법령해석 요청 시점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법제처의 협의 · 조정에 따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의견을 밝힌 경우

- (정부 부처와의 협력 강화)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 등 법령해석 수요가 많은 주요 부처(부서)와 정기적 간담회 개최 등 상시 협업체계 구축, 법령해석 관련 업무처리의 신속화 · 효율화 추진

##### 협의 · 조정 사례

##### ▶ 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저지,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

**내용**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·처리업 허가취소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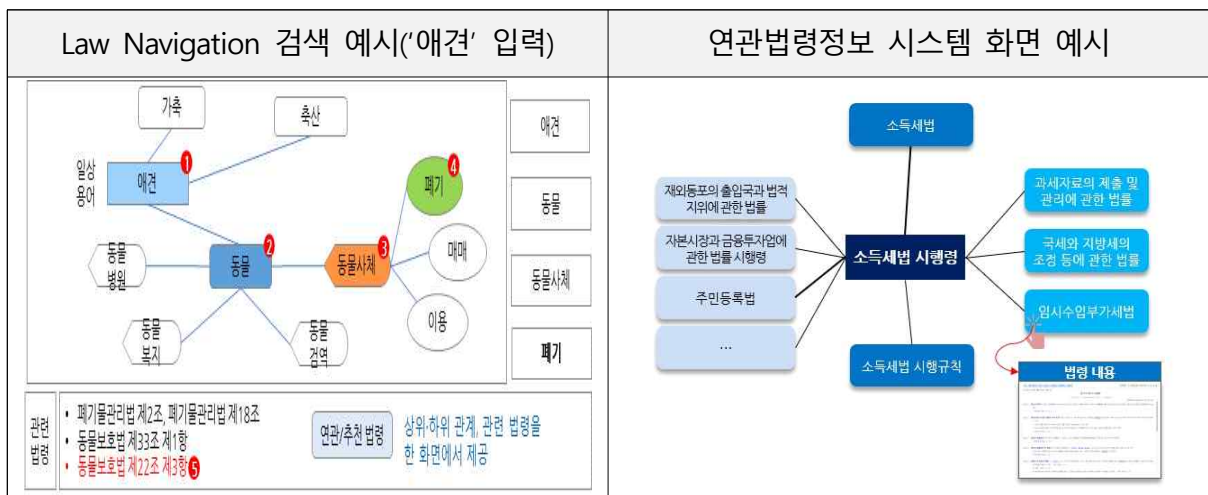


**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**

## 1 수요자 밀착형 법령정보서비스 제공

☐ 인공지능·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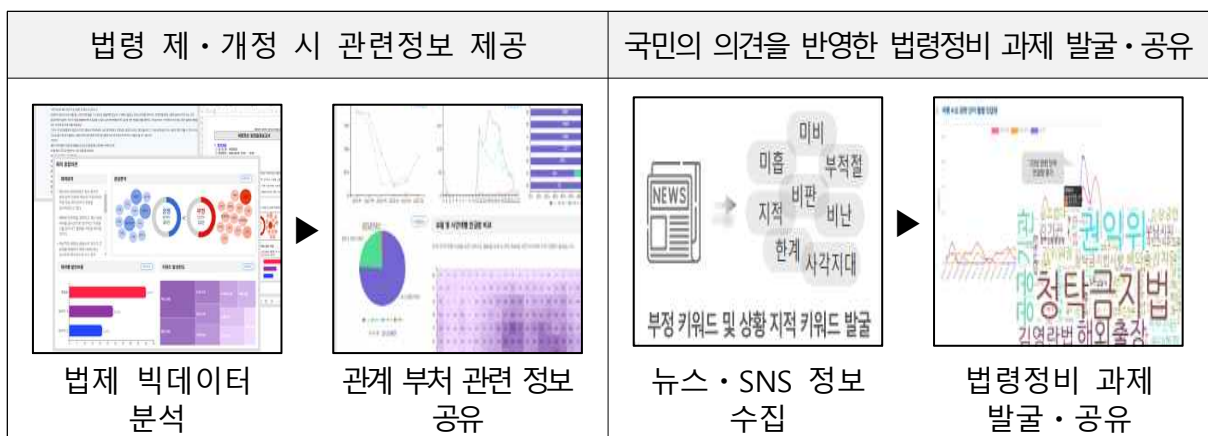
- (인공지능 연계 법령검색 고도화) 법령정보지식베이스 고도화를 통해 그래프를 이용한 법령 검색(Law Navi), 연관법령 검색 등 AI 응용 서비스 개발



- (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)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법제 데이터를 수집(비정형 데이터 수집·변환)·분석·활용하여 정부기관과 민간에 공유·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(정보화전략계획 수립)

【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수집·분석 데이터 】

- ▶ **(외부 법제 관련 데이터)** 국회 심사보고서, 발의법률안, 법원 판례, 헌재 결정례 등
- ▶ **(해외 법제 데이터)** 각국의 법령정보, 법령 검토서 등
- ▶ **(뉴스, SNS 데이터)** 국민이 불편·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정비 수요 의견 등



## □ 수요자 중심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 개선

- (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성 · 접근성 제고) 헌법기관 ·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\*

\* 과기부, 복지부, 농식품부 등 법령해석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중앙부처 법령해석 통합 · 제공

-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서비스 개시(25.4월~)

- (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정보 공동활용) 국민 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우수사례 발굴\*

\* (시행근거) 공공데이터법 제14조(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)에 따른 공동활용 촉진

- 법령 관련 공공데이터를 확대, 국내 리걸테크 사업자가 ODA 사업을 통해 구축 · 개선된 해외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 ·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## □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서비스 확대

- (사회 이슈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 제공) 저출생 ·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비, 일상생활안전 등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\* 개발

\* (법령) 저출생 지원, 은퇴 · 연금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지원 등

\*\* (조례) 귀농 · 귀촌 · 귀어 지원, 폭염피해 예방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

- 신속 ·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 단축(격월 ⇨ 매월)

- (국민 수요를 반영한 시각 법령정보 콘텐츠 확대) 국민적 수요(대국민 설문조사, '24.12월)가 높은 재정 · 경제 분야 법령 등을 그림 · 사진 · 표 등 시각 콘텐츠\*로 개발하여 법령과 함께 제공

\* '25년 530여개 콘텐츠 추가 개발 · 제공 예정

### 【 개별 조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공 예시 】

| 그림 | 사진 | 절차도 | 관계도 | 표 | 계산식 |
|----|----|-----|-----|---|-----|
|    |    |     |     |   |     |

- (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확대) 재한 외국인·이주민의 국내 생활 편의 증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법령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·제공 확대
  - 국내 체류외국인이 10만명 이상인 4개 언어(영어, 베트남어, 중국어, 태국어)로 그림·표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 제작·제공\*

\* 노동, 복지, 사회안전 및 K-창업·투자 분야 집중 개발

## □ 글로벌 법령정보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강화

- (해외법령 정보 제공 분야 확대) 수출유망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K산업\*에 추가하여 K푸드·K시푸드·K건설 등 해외법령 정보 제공 산업 확대

\* K콘텐츠, K화장품, K의료 법령제공 국가 및 분야 확대

-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각 산업별 실무 정보 제공 웹페이지를 연계하여 해외 법령정보의 원스톱(One-Stop) 제공 구현

### 【 산업별 법령정보 협업체획 】

| 분야              | K푸드(신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시푸드(신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건설(신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협업 기관<br>(웹사이트) | 농수산식품유통공사<br> Kafi 농식품수출정보             | 해양수산부<br>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       | 해외건설협회<br> OCIS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     |
| 분야              | K콘텐츠(확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화장품(확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의료(확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협업 기관<br>(웹사이트) | 문화체육관광부<br> WelCon Well-made K-Content | 식품의약품안전처<br> K-C-A 대한화장품협회 | 보건산업진흥원<br> KHIDI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|

- (국내 법령의 영문 번역본 정비) 외국인의 국내체류 및 투자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문 법령 번역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법령\*의 영문 번역본 정비 추진

\* (예시) 「법인세법」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

## 2 세계와 함께하는 법제교류 확대

### □ 법령정보시스템 ODA의 기반 강화

- (ODA 사업의 내실 강화) ODA 사업(인도네시아, 네팔, 베트남, 우즈베크, 미얀마)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계,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도모

**< '25년 법제처 ODA 사업 계획 >**

| 수원국    | 사업명            | 기간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인도네시아  |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   | '23.~'28. |
| 네팔     |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| '24.~'25. |
| 베트남    |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| '25.~'27. |
| 우즈베키스탄 |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| '25.~'26. |

- (ODA 사업의 양적·질적 확대) 신규 ODA 후보국 추가 선정<sup>양적 확대</sup> 및 ODA 사업방식의 다각화 추진<sup>질적 확대</sup>

- 법제 유관기관(한국법제연구원, 한국법령정보원 등)과 협업, 타부처 ODA 사업의 법·제도 분야 컨설팅 보고서 작성·제공 등 시스템 ODA 분야\*에서 법제처 역할 확대 추진

\* 타부처의 일부 정보시스템 ODA 사업에 대해 수원국의 법/제도 상충 및 법제전문가 부재 등에 따른 법제 정비 미흡 문제 대두

▶(사례) ODA 예비조사 단계에서 수원국 법/제도의 미비한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수원국의 법/제도 정비 방안을 사업계획에 연계하지 않아, 시스템 미활용

## □ 아시아 지역 법제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

- (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) 아시아 국가의 법제 업무 담당 기관들이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(CALI) 설립 추진

-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준비위원회('24.11.1. 발족)를 통해 참여 국가(태국·캄보디아)와 조직·기능·운영규정(안) 협의 추진, 하반기 중 설립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(MoU) 체결
- 베트남·인도네시아·네팔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방문 등 교류·협력을 통해 참여 국가 확대 추진

### 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(CALI) 】

- (주요 기능) ①법제 현안 공동 대응 ②법제행정 상호 발전 협력 ③법령정보 공유 및 법령정보시스템 전파 ④ 법령 정비 경험 공유
- (대상 기관) 태국 내각사무처·캄보디아 내각사무처(협의 완료)  
베트남·인도네시아·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법제기관(협의 추진)

- (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)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관심 가질 미래 법제 쟁점을 회의 주제로 선정, 하반기 개최